



“전북 현안, 정부 뒷받침 더해져야”

김관영 도지사,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 완주-전주 통합·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등 적극 건의

전북특별자치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4일 서울 종합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전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사업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전북이 중장기 전략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특히 새 정부와의 협력 강화 및 국비 확보를 위한 재정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북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가 이날 총리에게 직접 건의한 핵심 현안은 △완주-전주 통합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새만금 글로벌 첨단산업전략기지 조성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고령친화산업융합단지 조성 등으로, 모두 전북의 장기적 성장 동력과 직결되는 과제들이다.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김 지사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도의 행정 체계 개편이 절실하다”며 “전북은 완주-전주 통합을 통해 광역권 중심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특례시 지정 인구 기준을 수도권보다 완화하고, 보통교부세 상향 지원, 통합청사 건립비 지원, 행정구 추가 설치 등의 과감한 행·재정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연내 주민투표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통합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는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K-컬처, AI 등 대한민국이 보유한 문화·기술 경쟁력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최근 인도, 카타르 등 경쟁 국가들의 유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만큼, 초기 대응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사진 오른쪽)가 4일 서울 종합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주요 현안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김 지사 “균형발전 전략과 연계돼...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
김 총리 “건의사항에 충분히 공감... 실질 방안 도출토록 검토”

국가 차원의 전략적 과제로 채택돼야 하며, 국무총리 직속 유치지원위원회 설치, 특별법 제정 등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글로벌 첨단산업전략기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김 지사는 “30년 넘게 논의만 반복돼 온 새만금 사업은 이제 실질적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바이오, 방산,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전략산업을 실증하고 육성할 수 있는 국가 테스트베드로 새만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남북 3축 도로’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

당성조사 면제 △규제·제도·인프라·인력 등 신산업 핵심 요소를 새만금에 포괄 적용하는 ‘메가 샌드박스’ 도입 △공공주도 매립을 통한 안정적 기반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전북지역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전북은 이미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 RE100 산업단지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라며, “RE100 선도지역 지정과 함께 전력요금 인하, 세제 감면, 각종 규제의 대폭 완화 등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지사는 고령친화산업융합단지 조성을 비롯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국가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전북은 고령화율이 높아 미래 복지산업 및 고령 친화 산업 육성의 거점지로 잠재력이 큰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복합단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면담을 마무리하며 “이번에 건의한 현안들은 전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계된 중대한 과제들”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정책적 뒷받침이 더해진다면 전북은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북이 건의한 사항들에 충분히 공감하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실질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도내 양자과학기술 태동 첫 사례

전북대·한솔케미칼·전북TP 컨소시엄, 과기정통부 등 주관

2025년 수요기반 양자기술 실증·컨설팅 공모서 1위로 선정

국비 14.5억원 확보... 양자점 기반 압전 하베스터 시제품 실증

전북자치도가 미래산업 핵심인 양자 기술 분야에서 첫 국가사업을 따내며 양자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도는 전북대학교 컨소시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2025년 수요기반 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 공모에서 1위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양자기술은 자연현상의 최소 단위를 활용한 차세대 기술로, 도청 불가능한 양자통신, 초정밀 양자센서, 초고속 양자컴퓨터 등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총 28억원(국비 14.5억원, 지방비 4.4억원, 민간 9.1억원)을 투입해 양자점 기반 압전 하베스터 시제품 제작 및 실증을 진행한다.

전북대 반도체과학기술학과 김희대 교수팀이 주관하며, 기술 상용화 및 실증을 담당할 한솔케미칼과 양자기술의 지역 확산과 수요기업을 매칭할 전북테크노파크가 참여하는 산학연 컨소시엄이 협력한다.

‘에너지 하베스터’는 작은 에너지를 수집해 활용하는 차세대 기술로, 기존 진동·광·열 기반 하베스터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고온·고습·고전자과 환경에서도 작동 가능한 자가발전 IoT 센서 기술을 구현해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지속가능한 IoT 환경을 만든다는 목표다.

이 기술은 친환경·ESG 경영과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 지역 산업 전반에도 적용될 수 있다. 도는 양자기술과 퍼지컬 AI 모빌리티 사업을 융합해 전북을 AI 양자산업의 테스트베드 선도지역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선정은 전북에서 양자과학기술이 태동하는 첫 사례이자, 미래 게임체인저인 양자기술 전환을 준비하는 상징적 성과”라며 “향후 양자센서, 양자통신, 양자소자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에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도내 심정지 환자 회복률 15.8%

올 상반기 기준... 구급대원 역량 강화 등 주요인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올해 상반기 병원 전 단계 심정지 환자의 회복률이 15.8%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11.7%보다 4.1%p 높은 수치이며, 소방본부가 설정한 연간 목표치 12%도 크게 웃도는 성과다.

올해 상반기 도내에서 이송된 병원 전 심정지 환자는 총 650명이었으며, 이 중 103명이 심장이 다시 뛰었다. 전북소방본부는 이 같은 회복률 향상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대응체계 개선과 구급대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소방본부는 심장박동 회복률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현장 전문

자격자 확대 배치, △찾아가는 구급대 컨설팅 운영, △고난이도 전 문처치 반복 숙달훈련을 통한 실천 대응력 강화 등을 꼽았다.

특히 심정지 환자 회복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전문처치 지표들에서도 전반적인 향상이 두드러졌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실시간 영상으로 현장을 지도하는 전문의료지도가 활발히 이뤄졌고, 현장 약물투여율도 눈에 띄게 상승했다.

한편, 회복된 환자의 67.9%는 심정지 순간을 목격한 도민이 심폐소생술(CPR)을 즉시 시행한 경우로 분석됐다. 이는 초기 대응이 환자의 생존 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만호 기자

완주군

완주군의의회
Wanju County Council

맞지않는데,
억지로 끼워넣는다고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맞지않으면, 멈춰야합니다
완주는 완주답게! 전주는 전주답게!

전주시